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실태 점검 보고서

핵심 요약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정 제도다. 지방재정법 제39조는 단체장이 주민 참여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민선8기는 이 제도를 두 방향에서 동시에 후퇴시켰다.

① 예산 규모 축소 200억 원(2021) → 50억 원(2024~), ▼75%

② 시민참여 요소 축소 참여 창구 3개→1개, 정책숙의형·동지원사업·예산연구회 폐지, 위원회 연간 회의 11회→1회

주요 지표 비교: 민선7기 vs 민선8기

구분	지표	민선7기	민선8기	변화
예산	연간 공모 예산	200억(2021~22)	50억(2024~)	▼75%
예산	시민제안 선정 건수	132건(2021)	16건(2023)	▼87.9%
예산	온라인 투표 득표	68,316표(2019)	2,109표(2023)	▼96.9%
참여요소	참여 창구 수	3개(시정·구청·동)	1개(시정만)	▼66.7%
참여요소	구청참여형	1,778건(2022)	0건(2024~)	폐지
참여요소	정책숙의형	6건·49.5억(2021)	—	폐지
참여요소	동지원사업	106건(2022)	—	폐지
참여요소	위원회 연간 회의	11회(2019)	1회(2025)	▼90.9%
참여요소	예산학교 계획인원	1,000명(2022)	400명(2026)	▼60%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연도별 운영계획 자료 종합

주요 분석 내용

홈페이지 공개 데이터와 행정정보공개 답변자료의 불일치

2022년 홈페이지에는 선정 사업 1건만 공개되어 있으나, 행정정보공개 답변자료(2026.05.21.)에는 총 220건(시정참여형 29건·정책숙의형 4건·구청참여형 40건·동참여형 147건)이 선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홈페이지가 전체 선정 결과의 0.5%만 공개하고 있는 셈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사업 성격의 질적 변화

정책숙의형 폐지 후 광역 정책 의제(청년 주거, 수환경 개선, 기후 대응 등)를 제안하는 창구가 사라졌다. 민선8기 선정 사업 최대 규모는 3억 원으로, 정책숙의형 1건당 최대 10억 원과 비교된다.

참여 분야 편향

시정참여형 내 공동체·복지 비중이 2019년 41%에서 2025년 9%로 급감하고, 건설·교통 비중이 11%에서 39%로 역전되었다. 구정참여형·동지원사업 폐지로 사라진 생활환경·공동체 영역이 시정형으로도 흡수되지 못했다.

민선9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복원을 넘어 더 나은 제도로

민선8기 4년이 보여준 것은 명확하다. 제도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민선9기의 과제는 단순히 예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 구정참여형과 동지원사업을 복원하여 생활밀착형 참여 창구를 되살릴 것
- 정책숙의형을 복원하되, 평화·성평등·시민참여·기후정의 등 가치 중심 사업으로 운영하고 조례로 명문화할 것
- 환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이 참여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예산학교·시민총회·숙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를 증액할 것

[성명] 시민의 예산 참여권을 보장하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제도다. 어떤 사업을 얼마의 예산으로 추진할지, 그 결정 과정에 시민이 주체로 서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다.

대전광역시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 제도 도입 이후 민선7기까지 꾸준히 확대해왔다. 공모 예산은 30억 원(2018)에서 200억 원(2021)으로 늘었고, 시정참여형·구청참여형·동지원사업의 3단계 구조로 체계화되었으며, 정책숙의형과 예산연구회 등 시민 참여의 깊이를 더하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대전시는 어떠한 공식 논의도, 시민 의견 청취도 없이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했다. 이후 4년간 축소는 더욱 심화되었다.

우선, 예산 규모가 무너졌다. 연간 공모 예산은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75% 삭감되었다. 예산이 줄면 선정 가능한 사업 수와 규모가 함께 줄고, 시민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진다.

두번째로 시민참여 요소가 사라졌다. 시민제안 접수 건수는 2022년 2,662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95.5% 급감했고, 온라인 시민투표 득표는 47,752표(2021)에서 2,109표(2023)로 쪼그라들었다. 2022년에는 시민이 2,662건을 제안하고 총회에서 70건을 선정했음에도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단 1건, 0.04%에 그쳤다. 위원회 연간 회의는 민선7기 평균 10회에서 2025년 단 1회로 줄었다.

민선8기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논리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전시 예산 내에서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제도다. 즉 시민참여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재정 절감이 아니라, 그 비율만큼 시민이 아닌 시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더욱이 예산만 줄인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예산조차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구조와 방식을 함께 없앴다. 이는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 권한을 체계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우리는 민선9기에 다음을 제안한다.

단순히 예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구정참여형과 동지원사업을 복원하여 생활밀착형 참여 창구를 되살리고, 정책숙의형을 복원하되 시설정비 중심이 아닌 평화·성평등·시민참여·기후정의 등 가치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조례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환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이 참여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학교·시민총회·숙의 과정을 뒷받침하는 운영비도 함께 증액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실태 점검 보고서

2026.06.1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목 차

I . 점검 배경 및 목적.....	4
II . 예산 규모 축소: 시민이 참여할 판을 줄였다.....	5
1. 연도별 공모 예산 편성액 추이.....	5
2. 시민제안 접수·선정 건수 추이.....	5
3. 온라인 시민투표 참여 추이.....	7
III . 시민참여 요소 축소: 참여 방식과 통로를 없앴다.....	9
1. 참여 구조의 단순화 — 3단계에서 1단계로.....	9
2. 창구 폐지로 사라진 분야.....	10
3. 정책숙의형 제도 폐지.....	11
4. 예산학교 대상 축소 및 성격 변화.....	13
5. 위원회 구성·운영 축소와 심의 형식화.....	14
IV . 종합 평가: 민선7기 vs 민선8기.....	16
V . 민선9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복원을 넘어 더 나은 제도로.....	18

I. 점검 배경 및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대전광역시도 2007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확대·발전시켜 왔다. 민선7기(2018~2022)에는 공모 예산을 30억원(2018)에서 200억 원(2021)까지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70명에서 110명으로 늘렸다. 특히 2020년에는 시정참여형·구정참여형·동지원사업으로 참여 구조를 다원화하고, 정책숙의형 제도를 도입하였다. 시민투표 비중도 50%로 확대하는 등 예산 규모와 시민참여 방식 모두에서 제도의 내실을 강화하였다.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전국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2022년 7월 20일, 민선8기 출범 직후 대전시는 자치구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발송하였다. 어떠한 공식 논의 과정도, 주민 의견 청취도 없는 행정 지시였다. 공식적으로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으나, 대전시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에서 이 제도를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를 축소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2년 7월 21일 성명을 통해 "이장우 시장은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필요하에 15년 가까이 소중하게 키워온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즉각 "주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후 민선8기 4년간 제도 축소는 더욱 심화되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daejeon.go.kr/jumin/index.do>)에 공개된 제안사업 진행상황·투표결과·위원회 활동 데이터와 연도별 운영계획서, 그리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대전광역시에 청구한 행정정보공개 답변자료(2026.05.21.)를 기반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민선8기의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째는 예산 규모 축소, 즉 시민이 참여할 사업의 수와 규모 자체를 줄인 것이고, 둘째는 시민참여 요소 축소, 즉 예산이 남아 있더라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과 통로를 없앤 것이다. 이 두 가지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이 민선8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핵심 문제다.

II. 예산 규모 축소: 시민이 참여할 판을 줄였다

1. 연도별 공모 예산 편성액 추이

주민참여예산 공모 편성액은 시민이 제안하고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의 총량을 결정한다. 예산이 줄면 선정 가능한 사업 수와 규모가 함께 줄어든다.

<표 1>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공모 편성액 (단위: 억 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편성액 (억)	30	100	100	200	200	100	50	50	50
민선	민선7기	민선7기	민선7기	민선7기	민선7기 →8기	민선8기	민선8기	민선8기	민선8기

민선8기 4년(2023~2026) 평균 예산은 62.5억 원으로, 민선7기 최고치(200억 원) 대비 **75% 삭감**되었다. 예산이 줄면 선정 가능한 사업 수 자체가 줄고, 그만큼 시민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아진다. 참여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라는 판이 좁아지면 참여의 실효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2. 시민제안 접수·선정 건수 추이

민선7기(2021~2022년)에는 시정참여형 외에 **정책숙의형**이라는 별도 트랙이 운영되었다. 정책숙의형은 1건당 최대 10억 원 규모의 정책 수준 사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합치 심사 → 숙의 총회라는 심층 숙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다. 2021~2022년 35건이 접수되어 6건(49.5억 원)이 최종 예산에 반영됐다. 이 제도는 민선8기 들어 폐지되었다.

<표 2> 연도별 시민제안 접수·선정 건수

연도	유형	시민제안 접수	위원회·합치 심사	총회선정	예산편성·의회 의결	민선
2019	시정참여형	1,791건	159건	99건	99건	민선7기
2020	시정참여형	1,481건	152건	72건	72건	민선7기

2021	시정참여형	2,154건	376건	132건	132건	민선7기
2021	정책숙의형	(포함)	민관협치 12건	숙의총회 7건	6건(49.5억)	민선7기
2022	시정참여형	2,698건	196건	70건	1건*	민선7→8기
2022	정책숙의형	—	—	—	폐지	민선8기 출범
2023	시정참여형	119건	18건	16건	16건	민선8기
2024	시정참여형	132건	30건	29건	26건	민선8기
2025	시정참여형	185건	41건	33건	33건	민선8기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제안사업 진행상황 데이터

※ 정책숙의형: 민관협치 심사·숙의총회 별도 운영, 1건당 최대 10억 원, 2021~2022년 운영 후 민선8기 폐지

※ *2022년 시정참여형 예산편성 1건(재활용 기계 확대 설치): 총회 선정 70건 중 1건만 예산 반영, 홈페이지 데이터 참고

시민제안 접수 건수는 2022년 2,662건에서 2023년 119건으로 **95.5% 급감**하였다. 정책숙의형 폐지까지 더하면 민선8기의 시민 참여 축소는 단순한 건수 감소를 넘어 제도 자체의 다양성이 사라진 것이다.

주목할 점은 2022년이다. 시민이 2,698건을 제안하고, 총회에서 70건이 선정됐음에도 실제 예산편성은 **단 1건(0.04%)**에 그쳤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미 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조차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제도의 실질적 붕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수치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정참여형 기준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구한 행정정보공개 답변자료(2026.05.21.)에는 2022년 선정 건수가 시정참여형 29건, 정책숙의형 4건, 구정참여형 40건, 동참여형 147건 등 총 220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홈페이지가 전체 선정 결과의 0.5%만 공개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사업의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여의 완결이 아니라 참여의 단절이다.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전 유형의 접수·선정·집행 결과를 홈페이지에 통합하여 공개해야 한다.

<표 3> 연도별 시민제안 단계별 건수 및 최종 선정률

연도	시민제안 접수	위원회 심사	투표 대상	총회선정	예산편성	최종 선정률	민선
2019	1,791건	159건	136건	99건	99건	5.5%	민선7기

2020	1,481건	152건	97건	72건	72건	4.9%	민선7기
2021	2,189건	388건	180건	139건	138건	6.3%	민선7기
2022	2,698건	197건	91건	70건	1건	0.04%	민선7→8기
2023	119건	18건	16건	16건	16건	13.4%	민선8기
2024	132건	30건	30건	29건	26건	19.7%	민선8기
2025	185건	41건	37건	33건	33건	17.8%	민선8기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제안사업 진행상황 데이터

※ 최종 선정률 = 예산편성 건수 ÷ 시민제안 접수 건수 × 100

민선8기의 선정률(13~20%)이 민선7기(5~6%)보다 높아 보이는 것은 구조적 착시다. 접수 건수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에 절대 건수로 보면 민선7기 72~138건에서 민선8기 16~33건으로 크게 줄었다. 경쟁할 사업이 없으니 통과율이 높아 보이는 것이다.

3. 온라인 시민투표 참여 추이

온라인 시민투표는 일반 시민이 예산 사업 선정에 직접 의사를 표현하는 핵심 참여 창구다.

<표 4> 연도별 온라인 시민투표 득표 총합 및 선정사업 건수

연도	총 득표수	선정 건수	사업 1건당 득표	민선
2019	68,316표	99건	약 690표	민선7기
2020	25,797표	72건	약 358표	민선7기
2021	47,752표	138건	약 346표	민선7기
2022	10,335표	1건	약 10,335표*	민선7→8기
2023	2,109표	16건	약 132표	민선8기
2024	2,337표	26건	약 90표	민선8기
2025	3,309표	33건	약 100표	민선8기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투표결과 데이터

※ 득표 총합은 1인이 복수 사업에 투표 가능하므로 참여자 수와 다를 수 있음

※ *2022년은 총회 선정 70건 중 예산편성 1건만 반영된 이상치

득표 총합은 2021년 47,752표에서 2023년 2,109표로 **95.6% 급감**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수치는 "사업 1건당 득표"다. 민선7기에는 사업 1건이 선정되려면 약 346~690표의 시민 선택이 필요했다. 즉 다수 시민의 공감을 얻어야 사업이 선정되는 구조였다. 반면 민선8기에는 90~132표만 받아도 선정된다. 이는 참여 시민 자체가 너무 적어 시민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Ⅲ. 시민참여 요소 축소: 참여 방식과 통로를 없앴다

1. 참여 구조의 단순화 — 3단계에서 1단계로

민선7기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참여 구조의 다양성이었다. 시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소규모 사업부터 자치구 단위 생활 현안, 광역 시 수준의 정책 사업까지 스케일에 맞는 사업 유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었다.

<표 5> 연도별 사업 유형별 제안 건수

연도	시정참여형(광역)	구청참여형(자치구)	동지원사업(마을)	합계	민선
2019	1,391건	400건	36건	1,827건	민선7기
2020	1,002건	479건	100건	1,581건	민선7기
2021	1,144건	1,010건	127건	2,281건	민선7기
2022	884건	1,778건	106건	2,768건	민선7→8기
2023	117건	2건	폐지	—	민선8기
2024	132건	0건	폐지	—	민선8기
2025	185건	0건	폐지	—	민선8기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제안사업 진행상황 데이터 및 동지원사업 진행상황 데이터

※ 동지원사업 2023년 이후 폐지

2022년에는 구정참여형 단독으로 1,778건이 접수되어 전체의 64%를 차지할 만큼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선8기 들어 구정참여형은 2023년 2건, 2024~2025년 **0건으로 사실상 폐지**되었다. 동지원사업도 2023년 이후 **폐지**되었다. 현재 민선8기에서 작동하는 사업 유형은 시정참여형 하나 뿐이다.

2. 창구 폐지로 사라진 분야

주민참여예산의 세 유형(시정참여형, 구정참여형, 동지원사업)은 단순히 지리적 규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이 담아내는 사업의 성격 자체가 달랐다. 따라서 하나의 창구가 사라지면 그 창구가 담당하던 성격의 사업을 제안할 공간 자체가 없어진다.

〈표 6〉 사업 유형별 제안 사업 분야 분포 (2021~2022년 접수 합산 기준)

분야	시정참여형(광역)	구정참여형(자치구)	동지원사업(마을)
건설·교통	604건 (30%)	859건 (31%)	44건 (12%)
환경·공원·녹지	441건 (22%)	946건 (34%)	116건 (31%)
공동체·복지·도시주택	274건 (14%)	363건 (13%)	72건 (20%)
문화·체육·관광	145건 (7%)	228건 (8%)	66건 (18%)
경제·과학·일자리	169건 (8%)	95건 (3%)	3건 (1%)
청년·가족	277건 (14%)	143건 (5%)	2건 (1%)
안전·행정·여성	108건 (5%)	152건 (5%)	60건 (16%)
합계	2,028건	2,786건 (→민선8기 폐지)	369건 (→민선8기 폐지)

※ 동지원사업은 2019~2022년 전체 합산

유형 별로 제안 사업의 성격이 달랐다. 시정참여형은 청년·가족(14%), 경제·과학(8%) 등 광역 정책 성격의 사업 비중이 높았다. 구정참여형은 환경·공원(34%), 건설·교통(31%)처럼 주민이 자치구 내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활환경 불편을 제안하는 성격이 강했다. 동지원사업은 환경·공원(31%), 공동체·복지(20%), 문화·체육(18%)처럼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이 중심이었다.

민선8기 들어 구정참여형이 폐지되면서 주민이 자치구 단위에서 생활환경 문제를 제안하는 창구가 사라졌다. 동지원사업이 2023년 폐지되면서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을 제안하는 창구도 막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영역이 시정참여형 안에서도 흡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표 6-2> 연도별 시정참여형 제안 사업 분야 비중 변화 (%)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4	2025
건설·교통	11%	19%	25%	36%	33%	39%
환경·공원·녹지	9%	11%	23%	20%	23%	17%
공동체·복지·도시주택	41%	42%	15%	11%	20%	9%
문화·체육·관광	7%	8%	6%	8%	12%	8%
경제·과학·일자리	3%	12%	11%	5%	2%	2%
청년·가족	0%	0%	13%	14%	3%	14%
안전·행정·여성	7%	6%	6%	5%	4%	6%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제안사업 진행상황 데이터

※ 2023년은 시정형 117건 중 분야 미분류가 대다수여서 제외

※ 공동체·복지·도시주택 비중은 2019년 41%에서 2025년 9%로 급감

공동체·복지 비중은 2019~2020년 41~42%에서 2025년 9%로 급감하였다. 반면 건설·교통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5년 39%로 역전되었다. 구정참여형·동지원사업이 주로 담당하던 생활환경·공동체 영역의 제안이 시정형 안에서도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해당 유형이 사라진 후 그 수요가 시정형으로 흡수된 것이 아니라, **시민이 그 영역의 제안을 아예 포기하거나 참여를 중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민참여예산이 시정형 하나로 좁혀진 상황에서 남은 사업마저 토목·시설 중심으로 편향되고, 시민 삶과 직결되는 복지·공동체 영역은 예산 제안의 공간에서 사실상 밀려난 것이다.

3. 정책숙의형 제도 폐지

정책숙의형은 시민이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정책 수준의 대형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민관협치 심사와 숙의총회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였다. 시민이 예산 과정에서 단순 제안자를 넘어 숙의와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사업 유형이었다.

<표 7> 정책숙의형 운영 현황 (2021~2022년)

단계	건수	비고
시민제안 접수	35건	1건당 최대 10억 원 규모

사업적합성 검토	35건	전원 통과
민관협치 심사	12건	시민·전문가·공무원 협치 심사
숙의총회 선정	7건	공개 숙의 과정
예산편성·의회 의결	6건 / 49.5억 원	민선8기 출범 후 제도 폐지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정책숙의형 제안사업 진행상황 데이터

6개 사업은 2021년 정책숙의형을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들이다. 청년 주거, 환경, 문화, 기술 등 광역 정책 수준의 다양한 의제를 시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발굴하고, 민관협치 심사와 숙의총회라는 공개적 검증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1건당 최대 1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선 시민 주도 정책 제안의 실질적 사례였다.

<표 7-2> 2021년 정책숙의형 최종 선정 사업 (예산편성 반영 6건)

사업명	제안자	사업비(백만원)
노후 매입임대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효과적인 청년 주택공급	이태호	1,000
다중시설 내 로봇활용 편의 및 방역지원 기반 안전한 환경구축	양정연	1,000
3대하천 유역 친환경적 관리방안 마련 및 수환경 개선 실증사업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500
대전시민 독서량 증진 및 지역서점 활성화	(사)대전광역시 서점연합회	1,000
대전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대전충남녹색연합	450
시민을 위한 대전드론공원 편의시설 및 기업지원 시설 확대 사업	(사)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1,000
6건	—	4,950

<표 7-3> 민선8기 시정참여형 최종 선정 사업 중 6건

연도	사업명	제안자	사업비(백만원)
2022	재활용 기계 확대 설치	채**	30
2023	대전지역도서전	이**	100
2024	대전 안심 집수리 사업	박**	200
2024	등급이 없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보행보조기가 필요해요	이**	50

2025	청년을 위한 국가공인 자격증 수험료 지원	김**	280
2025	대전 마을정원 조성 및 활성화 프로젝트	이**	205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제안사업 진행상황 데이터

민선8기 들어 정책숙의형이 폐지되면서 시민이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다. 대전지역도서전(2023), 안심 집수리 사업(2024), 청년 자격증 수험료 지원(2025)처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1건당 최대 10억 원 규모로 광역 정책 의제를 다루던 정책숙의형과 달리, 민선8기 선정 사업의 최대 규모는 3억 원이고 대부분은 그보다 훨씬 작다. 무엇보다 시민단체·연구소·협회가 조직적으로 제안하던 광역 정책 의제(청년 주거, 수환경 개선, 지역 문화 생태계, 기후 대응)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제도가 시민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다. 정책숙의형에서 시민은 대전의 정책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검토하며, 공개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주체였다. 지금 시민에게 남겨진 역할은 소규모 생활 불편을 개인 자격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책 참여의 장에서 민원 접수 창구로 좁아진 것이다.**

4. 예산학교 대상 축소 및 성격 변화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 및 대전시 예산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통해 시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민선7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별도 신청 없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교육 내용은 참여예산제도 안내, 사업 제안서 작성 실습, 제안 기법 안내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시민이 실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기반 시설 역할을 했다.

<표 8> 연도별 예산학교 운영 계획 현황

연도	민선	계획 참여 인원	주요 대상	운영 방식
2018	민선7기	300명	위원·시민·공무원	기본/심화/공무원 과정
2019	민선7기	500명	시민·위원·학생	찾아가는 예산학교, 청소년 과정
2020	민선7기	650명	시민·위원·청소년	예산 아카데미 상설화, 온라인 병행
2021	민선7기	미정	시민·위원·공무원	집합교육·비대면 병행

2022	민선7기	1,000명	일반시민·위원·청소년	전문성 강화, 컨설팅 연계
2023	민선8기	800명	위촉 위원·일반 시민	위원 필수 교육, 제안서 실무 중심
2024	민선8기	500명	예산위원·시민참여단	위원 역량 강화 심화과정
2025	민선8기	500명	제10기 위원·일반 시민	위원 위촉 전 의무 교육
2026	민선8기	400명	예산위원·시민참여단	기초·실무·심화 단계별

※ 출처: 연도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 (계획 기준)

두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첫째, 계획 참여 인원이 민선7기 최고 1,000명에서 민선8기 400명으로 **60% 감소**하였다. 둘째이자 더 중요한 변화는 대상의 성격이다. 민선7기 예산학교는 “일반 시민”을 1순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산학교·청소년 과정을 운영하며 시민 역량을 넓히는 데 초점을 뒀다. 반면 민선8기는 “위원 의무 교육”·“위원 역량 강화”로 바뀌었다. 예산학교가 시민을 예산 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장치에서 위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5. 위원회 구성·운영 축소와 심의 형식화

<표 9> 연도별 위원회 구성 및 회의 현황

연도	위원 수	분과 수	전체위	운영위	분과위	예산연구회	합계	민선
2018	70명	7개	2	2	2	2	8회	민선7기
2019	100명	7개	1	3	2	5	11회	민선7기
2020	100명	7개	2	4	3	1	10회	민선7기
2021	110명	7개	2	5	3	0	10회	민선7기
2022	110명	7개	2	4	2	0	8회	민선7→8기
2023	80명	4개	1	4	2	0	7회	민선8기
2024	80명	4개	1	1	1	0	3회	민선8기
2025	80명	4개	1	0	0	0	1회	민선8기

※ 출처: 연도별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및 홈페이지 위원회 활동 데이터

위원회 변화에서 주목할 것은 세 가지다.

민선8기 들어 위원은 110명에서 80명으로 27.3%, 분과는 7개에서 4개로 42.9% 줄었다. 분과가 줄면 각 분야별로 시민 대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든다.

예산연구회도 폐지되었다. 예산연구회는 위원·공무원·전문가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였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실질적인 작동에는 한계가 있었고, 민선7기 말에 폐지되었다. 민선8기에서도 복원되지 않아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공식적인 기구는 없는 상태다. 민선9기에는 예산연구회를 단순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자·현장 참여자·일반 시민이 함께 제도 자체를 고민하는 새로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회의 횟수도 민선7기 평균 10회에서 2024년 3회, 2025년 단 1회로 줄었다. 2025년은 전체위원회 1회만 열린 것이 전부다. 위원들이 모여 예산을 논의하고, 시민 제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사실상 없어진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도입된 서면심의 방식이 민선8기에도 지속되면서, 위원 간 토론과 숙의 없이 형식적 의결만 이루어지는 구조가 굳어졌다.

IV. 종합 평가: 민선7기 vs 민선8기

지금까지 분석한 지표를 예산 규모 축소와 시민참여 요소 축소 두 축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민선7기 vs 민선8기 주민참여예산제 핵심 지표 비교

구분	지표	민선7기	민선8기	변화
예산규모	연간 공모 예산	200억 원(2021~22)	50억 원(2024~)	▼75%
예산규모	시민제안 선정 건수	138건(2021)	16건(2023)	▼88.4%
예산규모	온라인 투표 득표	68,316표(2019)	2,109표(2023)	▼96.9%
시민참여요소	참여 방법 수	3개(시정·구정·동)	1개(시정만)	▼66.7%
시민참여요소	구정참여형 접수	1,778건(2022)	0건(2024~)	▼100%
시민참여요소	정책숙의형 제도	운영(6건, 49.5억)	폐지	▼100%
시민참여요소	동지원사업	106건(2022)	폐지	—
시민참여요소	예산연구회	후반 폐지	미복원	▼100%
시민참여요소	위원회 연간 회의	11회(2019)	1회(2025)	▼90.9%
시민참여요소	예산학교 계획 인원	1,000명(2022)	400명(2026)	▼60%

※ 출처: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및 연도별 운영계획 자료 종합

예산 규모와 시민참여 요소 모두에서 민선8기 들어 전면적으로 후퇴하였다. 특히 시민참여 요소의 축소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로 볼 수 없다.

구정참여형·동지원사업의 폐지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3개에서 1개로 줄었고, 그 창구들이 담당하던 생활환경·마을공동체 영역의 사업 제안 공간이 사라졌다. 정책숙의형 폐지로 시민이 정책 수준의 사업을 직접 숙의·선정하는 기회가 없어졌다. 민선7기 말 폐지된 예산연구회는 민선8기에서도 복원되지 않아, 제도 운영 방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공식적인 기구는 지금도 없다. 또한 현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는 사업 선정 결과까지만 공개될 뿐, 선정 이후 집행 현황이나 평가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환류 체계도 부족하다.

결국 민선8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규모도 줄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좁아지고, 참여할 수 있는 영역도 제한된 상태가 되었다. 이는 법이 의무화한 주민 참여 절차를 형식만 남긴 채 실질을 거둬낸 것이다.

V. 민선9기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복원을 넘어 더 나은 제도로

민선9기의 과제는 단순히 예산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 **구정참여형과 동지원사업을 복원하여 자치구 단위 생활환경 사업과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을 위한 생활밀착형 참여 창구를 되살릴 것**
 - 지금 시정참여형 하나만 남은 구조에서는 내 동네 골목 환경, 우리 마을 잔치, 이웃 돌봄 같은 소규모 공동체 사업을 제안할 공간이 없다. 창구가 다양해야 시민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다.
- **정책숙의형을 복원하되, 단순 시설 정비 중심이 아닌 평화·성평등·시민참여·기후정의 등 가치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조례로 명문화하여 단체장이 바뀌어도 제도가 유지되도록 할 것**
 - 정책숙의형을 그냥 복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민선7기 정책숙의형도 기후, 청년주거, 지역서점 같은 의제를 다뤘지만 제도가 조례로 명문화되지 않아 단체장 재량으로 없앨 수 있었다. 사업의 성격을 가치 중심으로 명시하고 조례로 보호해야 한다.
- **환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사업별 집행률, 완료 여부, 지연·변경 사유, 사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여 시민이 참여의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금은 시민이 제안하고 투표하고 선정되면 끝이다. 선정된 사업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어떻게 평가됐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없다. 참여는 선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 평가까지 이어져야 완결된다.
-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를 증액할 것 - 예산학교·시민총회·숙의 과정 등 실질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행정 예산 없이는 제도의 질을 높일 수 없다**
 - 공모 예산만 늘린다고 제도가 살아나지 않는다. 시민이 제안 역량을 키우는 예산학교, 함께 결정하는 시민총회, 깊이 있게 논의하는 숙의 과정 - 이 모든 것에 행정 운영비가 필요하다. 운영비 없는 참여예산은 껌데기다.